

# "한국, 장기침체 들어섰다" 경제 원로·전문가의 경고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9.30 21:28 | 수정 : 2019.09.30 21:28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 세미나

"규제 완화, 산업경쟁력 키워야"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 초입에 들어섰다는 경제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실물과 금융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불황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신산업 창출, 규제완화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전략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민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이 9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형 장기불황 가능성과 위기관리대책'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저성장 초입 국면으로 단정하고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놨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파괴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경기하강이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로 치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세계경제는 글로벌 리더십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세계가 리더십 공백을 겪고, 경제는 대공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경고와 대응책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지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이 중국 등의 추격을 받는 현상은 일본의 장기불황 초기와 같은 모습"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전환 목소리도 나왔다.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민간 경기는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며 "성장보다 복지에 예산이 치중돼 있고, 금리인하의 효과가 소비나 투자심리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시장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들의 심리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IS)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망치는 97.2였다.

예병정 김규태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인쇄하기

취소